

NGO 활동과 환경교육

I. 현대 사회와 NGO

UN과 NGO

국제연합(UN)의 경우 비정부민간단체(NGO)에 대한 그 역사적 유래는 유엔에서의 정부간의 여러 협상들이 국익과 국가의 위신때문에 합의도출이 어렵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를 공식 대표하지 않으면서 국가간의 공동선과 공동이익 및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함께 국제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같은 판단에서 유엔산하의 경제사회 이사회(ECOSCO: Economic and Social Council-UN)는 이 이사회와 관련이 있는 820여개 국제 민간단체를 몇개의 범주로 나누어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유엔 현장 제기조는 경제사회 이사회의 관할밑에서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국내적·국제적 NGO에 자문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경제사회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계가 있는 NGO와 협의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통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이같은 조례는 국제 NGO와의 사이에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될때는 관련 UN 가맹국과 협의한후 국내 NGO와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들 국제 NGO들은 각 영역마다의 분야에서 때로는 유엔과 함께 때로는 NGO들끼리의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풀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함께 풀기도 하며 또 NGO가 단합하여 정부간 협상에 대한 압력단체의



김문규 / 대한YMCA연맹 사무총장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졸업, (現)환경사 회단체협의회회장, 대한YMCA연맹 사무총장

역할도 한다. 1992년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의 환경과 개발 세계회의 때는 NGO들이 독자로 환경문제와 개발 및 여기에 관련된 남북문제등에 대한 대안협약안(Alternative Treaty)등을 만들어 세계가 직면하는 환경위기에 대한 여론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근년에 외서는 유엔차원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 이르는 국제협력에서도 한쪽에서는 침묵하게 대립하는 국가간의 국익대립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대립보다는 지구적 차원의 공동관심사인 구축·인권·개발 남북문제·환경·인구·여성·교육 등에서 NGO들의 활동이 정부간 협력이상의 실적들을 내고 있다. 한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편 조직된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경우는 발전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발전도상국들의 정부차원이 갖는 비효율성보다는 해당국의 NGO를 통한 지원이 바다를 통한 자조적 개발에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어 낸다는 판단에서 NGO 지원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1988년 집계만 보더라도 DAC의 NGO지원은 무려 42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현대사회와 NGO의 성립 당위성

그러나 NGO의 개념과 그 발전은 유엔에서 시작되었것은 아니다. 민간공익단체(NGO) 혹은 민간자발단체(PVO)로 불리는 이들 중간집단들은 원래가 근대시민사회의 시작과 함께 태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근대시민사회속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시민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토대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정부의 관료주의와 고립된 개인을 묶어 시민들의 공동선을 추구해 간 것이 그 원초적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사회의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 관료제도가 진행되어 가는 현대 산업 사회속에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NGO들이 분출하였다. 단 이들은 당시의 경직된 군사문화체제속에서 그 모습들이 가리워졌거나 아니면 일괄로 묶어 때로는 반체제운동으로 강압 통제 되었을 따름이었다. 이같은 강압정책을 위장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관변 NGO를 만들기도 했으며 때로는 체제하부구조에서의 각종 봉사 NGO들을 허용 내지는 권장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80년도 중반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정치체제의 경직성과는 관계없이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국제화는 정부나 기업의 힘이 체계화·조직화되면서 사회전반에 대한 시스템적 합리화가 진행되어 갔다. 이같은 상황 밑에서 우리사회는 공권력으로서의 정부관료제도와 사적인 기업관료제도에 대응하

는 NGO의 자율적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 개개인의 자유와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추세에 있다.

즉 오늘날의 사회구조는 기업이 개인들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고, 정부가 공공사업의 영역을 확충하며 또 복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의 역할만으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인간적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조직이 거대화 해가면서 복잡하게 시스템화해감에 따라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기존체제가 민첩하게 대응하기란 어려워 지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응급대응을 때로는 이미 구축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판단으로 기존질서의 틀밖에서 대응하는 활동을 거부 내지는 억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같은 현실 사회의 조직체계 밑에서 NGO들은 정부나 기업의 권력세계로부터 자유롭게 때로는 이들과 대치(對峙)하면서 이들 전자의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못했거나 거부당한 정당한 인간적 욕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NGO의 현대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이해는 또 그 어떤 권력구조도 사회적 공간을 완전히 통치관리해 내지를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NGO들은 개개인 시민들의 자유와 자율을 통한 단체적 연대적 활동을 통해 정치가 지배하기 쉬운 관료주의에 의한 행정이나 상업주의나 시장경제에 의해 비틀어지고 한정되고 때로는 방향상실을 하고 있는 현대적 사회구조에 대한 항의성 대안적 운동으로 보아도 된다.

이점 현대 시민사회구조가 가장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정부행정의 기능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NGO들이 대항적 대안적 성격의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 NGO, 교육 NGO, 공동체 NGO, 환경 NGO, 경제사회문제 NGO 등등이다.

특히 환경 NGO의 경우는 비록 선진국 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제 3세계에서도 다른 어느 영역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는 환경 NGO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풀뿌리 NGO운동은 방대한 힘으로 부풀어 올랐으며 지역별 폐기물의 재활용 운동에서부터 국제무역, 남북간의 채무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활동은 다양하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특히 중진 국가 내의 NGO 활동도 근년에 와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 NGO의 성격 규정

이상에서 보듯 NGO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구조속에서 이제는 불가결의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민간단체를 통털어 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환경과 개발 영역에서 NGO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특히 정부출자의 민간단체, 기업출자의 민간단체 혹은 특정이념의 선규정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단체, 혹은 다국적 기업의 민간단체 등등은 이 발표문에서 사용하는 NGO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NGO는 기본적으로 시민생활과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면서 앞서 언급한 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풀뿌리 NGO를 말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념적인 지향성은 1992년 브라질에서의 환경 NGO가 규정하고 또 UNCED 자체가 채택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개발(Environmentar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역사회, 국가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이념을 일차적인 존재이유로 규정하는 NGO를 말한다.

요즘에 와서 NGO 활동과 역할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또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적 국제적 관심과 규제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저마다 환경부서를 두어 기업의 환경적 대응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

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 기업은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기존 환경관계법규를 피하기 위한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사업단체를 산하에 두기도 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풀뿌리 환경 NGO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 NGO의 기본성격은 순수 자발적인, 비영리, 비정부 민간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들 순수 NGO의 목표는 때로는 국가적 이익차원까지도 넘어서는 국제적 연대에까지도 이른다. 국제적인 공동선의 추구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정책의 걸림돌을 벗어난 연대를 통해서만 그 목적 달성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국제인권운동 국제환경운동은 그 대표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유엔환경회의와 NGO의 역할

우리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환경과 개발문제에 접근하는 정부간 교섭과정과 NGO들의 문제 접근방법에서 그 역할의 차이와 분기점을 배울 수가 있었다. 그것은 정부간의 리우환경선언과 아젠다 21의 채택과정 및 NGO들이 '지구 포럼'(Global Forum)을 통해 채택한 NGO 대안협약(NGO Alternative Treaty) 채택과정 비교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103개국 수반이 채택한 리우환경선언은 적어도 환경 NGO들의 시각에서 보논한 타협의 산물로써 정의롭고 지탱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내용적 결단이 결여된 '실패선언'이라는 평가이다. 또 아울러 채택한 '아젠다 21'(Agenda 21)은 각국내에서 또 국제적으로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아젠다 21 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매 연간예산 일천이백억불에 대한 재정부담 약속은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다.

NGO가 UNCED와 함께 또 연계해서 조직한 지구환경포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14,

000 환경 NGO들이 대표를 파송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공동의 비전으로 공유한다. 그리고 이들 풀뿌리 환경 NGO들은 자신들이 속한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정부에 대한 환경정책에 대한 감시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리우에서의 103개국 국가정상에 의한 타협의 산물인 지구환경 헌장이나 아젠다 21(Agenda 21)은 오늘의 세계환경의 현실이 서구나라의 세계 인구 20%가 매년 세계차원의 80%를 소모하며 따라서 세계인구의 20%가 세계환경오염의 80%를 차지하는데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데 대해 NGO들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브라질 UNCED 회의가 노래처럼 반복한 지탱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성격규정에 있어서는 앞서 지적한 서구 선진국의 과다 환경오염책임은 제쳐놓고 앞으로의 환경세계구축을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을 선진국과 발전국을 함께 싸잡아 규제하려 함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선진국 환경오염책임을 정당화 시키면서 발전도상국의 개발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견해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오존층 파괴를 막기위한 CFC 생산의 규제이며 또 미국이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려하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이었다.

이와 같은 NGO들의 선진국 비판표명에는 물론 서구 NGO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어느면에서 그들의 자기비판 태도 때문에 세계 NGO의 여론이 UNCED 정상회담에 강한 도덕적 도전이 되기도 했다.

각국의 정부대표들은 이 회의를 계기로 환경 NGO들의 존재와 역할을 재평가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정부차원의 환경정책이 정부정책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환경 NGO들에게 좌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NGO에 대한 무관심, 정부 개발정책의 환경무시경향 등은 앞으로의 정부와 NGO들

의 빈번한 대화와 협조 및 상호역할 분담등을 통해 지탱가능한 개발의 실현에 노력해 가야 할 것을 되새겨 주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 환경 NGO의 현황과 그 역할

우리의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탱가능한 개발의 실현은 결국 정부의 개발 및 환경정책, 기업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및 시민중심의 환경보전 운동의 3요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그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상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환경개발 정책이 총괄적으로 경제기획원의 관장 밑에 있으며 환경처의 환경정책은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원인 제공 부서인 건설부, 상공부, 농수산부 및 과거 처 등은 환경처의 환경정책이 미치지 못한다.

이와같은 실정 밑에서 우리나라 환경 NGO의 현황은 어떠한가 환경처가 1992년 환경백서에서 집계한 환경 NGO의 분류에 의하면 다음의 7영역에서 분류하고 있다.

- 1) 환경문제를 사업으로 설립되어 허가된 법인체 32개 단체
- 2) 환경 NGO로 등록된 일반 사회단체 13개 단체
- 3) 등록된 공단 환경오염방지 협의회 17개 단체
- 4) 환경보전 범 국민운동 추진협의회 회원단체 19개 단체
- 5)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 10개 단체
- 6) 환경관련 임의단체 27개 단체
- 7) 기타 환경 관련 민간단체 12개 단체

이상과 같은 환경 NGO에 대한 분류는 정부부처가 허가한 단체 혹은 정부의 민간 NGO에 대한 등록여부에 따라 분류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환경법인체나 등록단체의 성격규명이 쉽지 않으며 또 여러 단체들의 중복 겹치기가 많다. 따라서 이상의 집계 또는 우리나라 환경 NGO의 성격과 그들의

활동방향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더우기 기존의 오랜 역사를 갖는 민간단체들이 환경처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전국 조직을 동원한 청소년 환경운동, 환경시민교육운동, 각종생활환경운동 생협운동등의 중요한 환경NGO 활동들이 환경처의 집계에서 빠진다. 뿐만아니라 91년 3월에 경남. 북 전역에 걸쳐 발생한 폐놀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많은 여러지역 환경단체들이나 환경문제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겨나고 있는 종교사회단체들의 활동도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지못하다.

그렇다면 90년대의 우리나라 환경 NGO 들의 성격과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분류해 볼수 있을까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또 NGO는 민간차원에서의 두줄기의 운동전개에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흐름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내무부산하에 자연보호협회의회를 만들어 자연보호헌장을 채택하고 이 협의회는 학계의 동식물 학자들과 일부 민간단체를 포함한 '자연보호' 내지는 자연환경 깨끗이 지키기를 주요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경제 성장정책에서 야기되는 개발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었다.

민간차원은 70년대 초기부터 이른바 '개발독재'로 지칭하는 정부의 무차별 성장주의와 공해산업의 도입등에 대한 비판들이 주로 종교계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이들은 반체제로 규탄되어 규제의 대상이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반시민사회에 토대를 둔 반공해문제연구와 활동이 시작됨으로 오늘의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전신들은 우리나라 환경 NGO의 역사에서 기록되어야 한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또 92년 브라질 UNCED와 민간지구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경 NGO는 갑자기 그 활동의 폭이 넓어졌으며 어느 일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NGO들이 자신들의 활동들을 환경운동 차원에서 재편성해가는 경향에 있다. 또 환경오염산업에 관련된 기업들도 나름대로의 환경

대책을 세워 환경기업차원에서(Eco-Business) 혹은 환경기술개발차원에서, 혹은 시민 소비자와의 공동 노력에 의한 에코마켓제도 도입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대응을 서서히 전개해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상의 간단한 배경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 NGO들의 활동과 그들의 접근 범주를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서 다음의 다섯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다.

1. 오늘의 한국적 환경문제의 성격을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파악하고 활동하고 있는 NGO들이 이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민족운동적 관점에서 원전반대 반핵,공해추방운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그동안의 정부개발정책을 비판하면서 시민적 힘을 결집해 간다. 이들 운동은 9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 시대상황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의 환경운동을 국가개발정책 및 환경보전정책과의 대조에서 전개한다. 이 영역 운동의 대표적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영광녹색동아리, 영덕 핵폐기장 반대 위원회 혹은 최근에 만들어진 녹색교통운동 등을 들수 있다.

2. 정부 주도아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해온 자연보호운동단체들이다. 이들의 경우는 환경문제가 갖는 구조적 쟁점들을 비정치화하는데 운동의 한계를 갖는다. 그 대표적으로 내무부의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환경처의 환경보전협회, 산림청의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등을 들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생태계보존에 중점을 두는 자율적인 자연보호운동단체들이 새롭게 생겨 났는데 자연사랑 낙동강 1300리회, 자연의 친구 등이 대표적이다.

3. 시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하는 환경보전 생활실천운동 단체들이다. 이들단체들은 각 단체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환경교육, 시민환경정보망구축, 환경문제쟁점부각을 통한 정부의 정책비판, 국제연대 등 활동을 펼친다. 여기에는 YMCA, 경실련, 청소년

년단체, 농민조직, 노동조합등을 들 수 있다.

4.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중심과제로 하는 지역환경 단체이다. 이들 가운데는 상수원보호와 공해, 협오시설 건설반대운동을 계기로 지역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교육운동, 자원재활용 운동등으로 그 관심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단체들이 적지않다. 이러한 단체로는 낙동강 살리기운동협의회, 군산 옥구환경시민회의, 신안군 환경보존회등을 들 수 있다. 지역환경운동단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적 취약성, 지도력과 전문성의 결여등으로 지속적인 일감 발굴의 실패등으로 유명무실한 단체인 경우도 많다.

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전문가 그룹과 연구기관이다. 이들 단체중 환경과 공해 연구회, 배달환경연구소 등이 민간환경 운동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 단체들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운동의 전문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많은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다수가 정부기관이거나 정부의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다.

이상의 범주 외에 공단 환경오염방지회의 여러 단체와 또 오늘의 심포지움을 주최하신 환경보전 협회는 기업이 자신들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혹은 이들 기업의 공동노력으로 환경보존에 참여하려는 단체들이 있다. 이들의 노력은 꼭 중요하다. 단 여기에서 본인이 선규정한 환경 NGO의 범주에서 편의상 제외한다.

이상의 각 부류에 따른 집계에 의하면 지역환경 단체까지 합하여 전국에 약 200여개의 순수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환경 NGO로 자신들을 자인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두번째를 제외한 대부분은 8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되었으며 시민운동의 발전배경속에서 출범되었다. 위의 다섯가지 영역은 모두 중요하고 또 저마다의 역할 분담이 있다고 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또 그 영역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할 범주가 세번째로 본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국가의

환경 정책과 국가와 기업의 지탱가능한 환경기술개발, 그리고 민간 NGO에 의한 끊임없는 환경생활 교육, 환경생활실천,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에 대한 정보의 수집, 감시 및 비판등이 모두 민간 NGO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 환경 NGO의 비판적 쟁점유발과 압력만이 오늘의 경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수정을 가져올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 NGO가 모든일을 다 할수는 없다. 특히 오늘의 환경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지구적 규모의 포괄성과 그 속에 한발만 들여 놓는 순간 요청되는 여러분야의 전문성, 정확한 현장파악을 위한 환경정보의 확보등이 없이는 효과적인 환경운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점 한국의 환경 NGO는 아직도 운동기반의 허약성을 면할길이 없고 따라서 환경 NGO 들간의 배경과 개성에따른 영역별 역할분담이나 효율적인 연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Ⅱ. NGO의 환경교육의 방향과 그 지표 설정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환경교육론]이 아니라 환경NGO들이 오늘의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성격과 배경을 전제로 한 환경교육의 방향과 그 지표 설정의 문제이다. 흔히들 환경전문가들의 접근방법을 보면 제도적 접근으로써의 환경관련 법규를 통한 접근, 환경과학 및 환경기술적 접근, 그리고 환경교육적 접근을 통한 시민교육 등으로 영역별 대응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전제에서는 세번째의 환경교육을 대체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생활교육으로 그 교육의 내용을 축소하고 그것을 '교육학자'의 손에 떠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또 정부의 환경교육의 역점도 오늘의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지구환경적 복합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이나 정부의 개발정책과의 상관성은 덮어 두기를 원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하는 환경교육은 한국의 환경 사회단체들의 짧은 발달의 배경에서 보듯 그 주류가 시민사회교육 차원에서 왔다가 보다는 70년대 이후의 한국적 사회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사회구조적 부조리에서 제기된 민생복지차원 내지는 개발과 공해 및 사회불균등의 부산물로 제기된 시민생활의 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의 환경NGO가 관심을 갖는 환경교육은 자연보호 차원이나 쓰레기 분리수거나 자원재활용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환경교육에 한정하지 않는다. 우리들 환경NGO의 환경교육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교육적 지표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환경 NGO의 교육적 지표

1) 환경의 개념을 지금까지의 물질적 풍요를 목표로 하는 성장과 개발에 따른 진보의 사상을 재검토함으로써 오늘날의 서구사회가 발전시켜온 사회발전모델이 그대로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 이전이 되고 그결과 전세계가 성장과 풍요를 즐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또 그렇게 되더라도 그와같은 개발모델이 오늘의 지구환경을 지탱해 내리라고 믿지 않는다. 오늘의 환경위기의 근본 뿌리가 서구의 끝없는 생산과 소비사상에 의한 풍요에 근거하는데 이같은 사상의 패러다임 전환은 종교적, 사회이념적 가치전환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2)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나 교육에서 즐겨 인용하는 용어가 '지구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지역 차원에서 행동한다'이다. 이는 오늘의 환경문제가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열대우림의 문제 등에서 보듯 그 특징이 지구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뒤에는 반드시 선진국의 개발풍요와 이를 지탱해 온 지구 자원의 제공자인 제 3세계가 빈곤탈피를 위한 개발충동에서 자원의 지나친 수탈문제가 얽혀있다. 즉 오늘의 지구차원의 환경위기는 곧 남북문제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전도상국가들의 개발정책은 성장우선 정책이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오염을 동반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신생중진국들의 경우는 개발불균형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구조적 성격을 파악 이해하지 않고는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비효율적인 절름발이 교육을 가져온다. 이점을 환경NGO의 환경교육은 중시한다.

3) 대치 생활양식 도출을 위한 교육에 중요지표를 둔다. 우리는 오늘날의 경제질서의 특색인 끝없는 생산과 소비의 한계와 위기를 깨닫는다. 또 이같은 위기는 국가간 계층간 불균형을 갖어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지표 설정은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지탱가능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삶의 철학을 바꾸어 갈 뿐 아니라 삶의 양식을 바꾸어 가는 운동이다.

이같은 삶의 양식 전환은 정부의 정책 전환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들고 국민들이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자율적인 상호훈련과 실천을 통해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두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자발적 교육은 지역의 풀뿌리 운동에서 출발될 때 능률이 올라간다. 그와같은 교육적 노력은 지역공동체 운동, 인간의 창조성 존중, 인간 영성의 중시, 삶에 대한 시경 사상 강조 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같은 강조점은 결국 소비의 증가에 기초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정신에 투철한다.

비록 우리의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출발은 개인의 책임이 출발점이 된다는 신념의 강조다.

환경교육의 목적과 YMCA의 교육적지도

환경교육의 목표설정에는 대한 국제적 노력은 여러차원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이 다듬어져 갔다.

그와같은 노력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1977년 유네스코가 유엔개발 프로그램(UNEP)의 협조로 구소련 조지아의 티비리시에서 개최한 각료급 국제 회의 때의 합의한 티비리시 선언과 권고이다. 이를 토대로 1992년의 UNCED 회의때의 아젠다 21 (Agenda 21) 제36장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권고도 주로 티비리시회의의 선언과 권고에 토대한 것들이다. 그 내용의 골격은 “환경교육이란 개인과 지역사회가 환경문제가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얽혀 그것이 자연과 인간환경사회에 작용하고 있음을 교육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복합성을 단지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이고 책임적인 참여를 위해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 태도, 가치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케함으로써 환경의 질적향상을 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시민들의 “환경적 시각”을 넓혀 주는데 있다. 환경교육은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넓은 시각으로 우리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게 생각할 뿐 아니라 자연과 생태계 까지도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데 있다. 이같은 시각에 설 때 환경교육은 세계평화, 민주주의, 인간문제들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환경시각의 확대를 위한 요구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사회가 지닌 환경교육정보로 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교육은 따라서 지구환경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동시에 지탱 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시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교육은 단기간의 교육과정으로 이수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양식을 전환하는 이로부터

시작한 평생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

한국 YMCA는 위에서 간략하게 요약한 환경교육의 지표와 교육목표를 갖고 지난 2년간 지역환경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몇번의 수정을 거쳐 대충 아래와 같은 교과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환경에 관심을 갖는 개인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운동영역이나 사회교육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지도자 내지는 단체 지도자를 전제로 한다. 그렇게하는 이유는 YMCA 자체의 교육제공 능력이 개개인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겠으나 환경보전운동은 반드시 지역중심의 풀뿌리 운동 혹은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만 그 효과를 낼수 있다는데 연유한다.

아래의 커리큘럼은 4박 5일의 공동 학습을 통한 집중교육과 후속교육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지역 시민대학 형식으로 몇주에 걸친 연속교육으로도 실시한다.

1. 지구환경론
2. 생물환경론
3. 사회환경론
4. 환경보전론
5. 생태적 생활론
6. 환경법규개설 및 환경행정의 지역적 현실
7.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UN 중심으로)

이상의 기초교육을 토대로 생태적 생활양식에 대한 분임토의, 야외활동 기초실습, 지역행정에서의 환경정책 견학, 폐기물수거 및 처리견학등을 통한 지역행정단위에서의 행정견학과 대담등으로 유도한다.

이상의 시도는 한 사회 교육단체가 갖는 환경교육적 노력이다.

우리들의 환경보전과 개선에 요청되는 교육은 크게는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과과정이 환경적 차원에서 재조명되어 커리큘럼의 재조

정이 요청된다. 뿐만아니라 문교당국은 그 사회교육적 대책에 있어서도 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이 교육적 과제들을 민간 NGO에 위임하는 위탁교육정책의 수립도 시급하다고 본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 성장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그 목표달성에 성공했다. 반면 그 대가로써 세계 유수의 환경파괴와 공해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 여러 형태의 사회적 불균형을 가져왔고 이같은 불균형과 갈등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들의 자연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의 환경악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까지 위협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보전을위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환경 NGO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시민적 대응을 펴고 있으나 환경문제가 갖는 복합적 성격과 전문성 요청에 비하여 이들 NGO들의 대응능력은 극히 미흡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환경보전 달성을 위한 노력은 크게 정부의 환경정책과 기업들의 지탱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환경기술의 개발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천 당사자는 시민 개개인의 실천노력 여부에 달려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 전환이나 기업의 환경적 노력도 시민과 환경시민 단체들의 여론조성과 압력적 노력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점 환경보전을 위한 문제만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의 밀접한 협력으로만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국의 환경 NGO들은 지금의 정부의 환경 정책과 기업의 환경 개선 노력을

그다지 믿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환경 NGO들은 어느면에서 포괄적인 정부의 개발성장 정책에 대한 대적 환경운동을 통해 결국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서서히 그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게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환경 NGO의 사회 교육적 노력이 오늘의 환경시민들의 무관심을 깨워 일으키고 이들의 뜻을 묶어가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02000400

○ 한국환경농학회

주소: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내

○ 동우환경평가(주) (전환경동우회)

주소: 마포구 동교동 205-8
윤호빌딩 2층

TEL: 322-8853~5

FAX: 322-8856

○ 주요사업내용

- 환경사업부

- 평가사업과(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사후환경관리)
- 약품사업과(실험실 이화학기구, 시약, 폐수처리약품)

